

# 민주 농어민위원회 공식 출범

이낙연 대표, 축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 농가 지원 노력할 것”

이원택 위원장 “250만  
농어민 희망 사다리 될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4일 공식 출범식과 함께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가 4일 공식 출범식과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원택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운영위원회 및 시도당 농어민위원장 간담회 등을 잇달아 열어 전국농어민위원회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올해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향후,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당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전국 농어촌 현장속으로 직접 들어가 농어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농어민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농어업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와 당정청 간담회 등을 통해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해 속도감있게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율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정개혁과제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며, 농어민 단체와의 교류·협

력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어촌 위기 해결을 주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지속가능한 농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농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제4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피해 농어민들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과정에서 농어민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히며 “농어업은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가능해야 하므로 농어민이 소외되지 않게 농어민위원회가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농어업·농어촌이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농어민위원회는 농어촌 현장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어민과 더욱 소통하며,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250만 농어민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만큼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심과과정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민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상민, 김의성, 김후주, 나진호, 백혜숙, 이상정, 임미애, 임정수, 정만철, 조원희 부위원장 등이 참석, 이낙연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유호상 기자

## “LH 투기 의혹 발본색원”

문 대통령, 이틀 연속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어 광명시 흥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추가 지시를 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다.

또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



를 반드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도록 했다. 공직자를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관련 조사를 맡을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별도로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합동 조사를 통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인사이다.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며 “우선 총리실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하고, 감사원이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같지는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뉴시스

##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 요람에서 무덤까지

등록비 지원 근거 마련

정운천 의원, 5법 대표발의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법 중, ‘반려동물전염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가 앞장서 변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반려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장묘시설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해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

우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장묘 시설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묘시설 영업자가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와 정부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압류가 가능한 물건으로 분류돼 압류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반려동물가압류금지법’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하도록 해 반려동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민주 이원택 의원, 김제

새뜰마을 선정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은 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프젝트 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에 김제시가 선정돼 4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0면>

이번에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시 신중동 금동지구 일원은 금성마을과 동신마을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80%에 달하고, 붕괴위험의 노후주택 등 위험구간이 산재해 있어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제시는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6만 2,677㎡면적에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심골목 조성, 결빙·불량도로 정비, 붕괴위험 노후주택 정비 ▲생활과 위생 인프라 개선을 위한 마을공동작업장 등 복합문화커뮤니티공간 조성, 분리수거장 조성, 주민쉼터와 주차 공간 조성, ▲복지증진을 위한 세대통합형 프로그램 개설,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집수리 봉사단 운영, 어르신 문화형 일자리 창출 사업 실시 등을 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문 대통령, 윤석열 사의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짧은 한 줄의 브리핑문을 발표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이뤄진 공개 발언을 통해 “저는 오늘 종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윤 총장 사의 표명이 있고 난 뒤 1시간 5분 만에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소식을 전했다.

오는 7일 임기 만료를 앞둔 윤 총장 사표를 숙전속결로 수리한 이면에는 윤 총장 행위를 사실상의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고 더 이상 재가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반영됐다.

사의 수용 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짧은 브리핑을 했던 것도 윤 총장 사의에 크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내비친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의 수용 절차에 대해 “법무부에 (윤 총장) 사표가 접수됐고, 사표 수리 관련 절차는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임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뉴시스

## 박용근 도의원, 정명 의정대상 수상... 광역의원 중 유일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이 4일 (사)한국유권자중앙회로부터 정명(正·明)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박용근 도의원은 전국 최초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방산업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 왕성한 입법활동을 비롯해 5분반, 건의안 등 도정 및 행

도의원이 유일하다.

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자는 국회의원 11명, 지방의원 2명으로 광역의원 중에서는 박용근

의원이다. /유호상 기자



# 민간조사 전문기업

#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 010-5636-7755

907호